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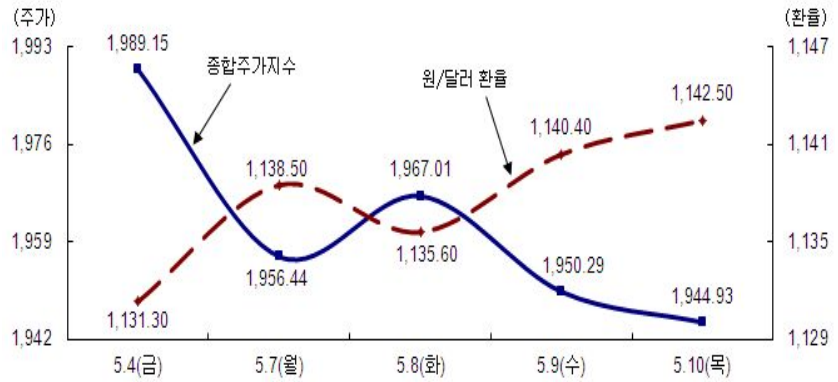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 일자리 연평균 96.2만개 감소, 잠재성장률 0.5%p 하락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4~5.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김 천 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 일자리 연평균 96.2만개 감소, 잠재성장률 0.5%p 하락

#### ■ 소비의 장기침체 지속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7.4%로 GDP 증가율 7.5%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은 3.1%에 머물러 GDP증가율 4.2%를 크게 하회하였다.

#### ■ 장기침체 배경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실질소득 증가율이 1990~1997년 6.9%에서 1997~2011년 0.8%로 급락하였다. 신규취업자가 44.7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5.7%에서 1.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위기 때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逆자산효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逆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가계의 금융자산이 감소하였고 (2002년 통계 발표 이래 최초), 주가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자산효과가 제한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카드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위기와 함께 급락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비소비지출 증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이 2002년 34.4조원에서 2011년 55.5조원으로 커졌고, 이로 인한 소비감소액(실질)은 2002년 27.0조원 2011년 34.9조원에 달한다. 또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1990년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5.6%였으나, 2011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중산층 위축) 소득 5분위 비율이 1990년 4.1에서 2011년 5.7로 상승하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1분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5분위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1년 67.7%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7.1%에서 12.4%로 증가하였다.

## ■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일자리 기회 상실)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밀돌면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었다. 만약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 (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 소비가 연평균 50.0조원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연평균 96.2만 개 증가하고, 고용률은 2.5%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잠재성장률 하락)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밀돌면서 잠재성장률이 0.5%p 하락하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7.2%에서 외환위기 이후(1997~2011년) 4.5%로 하락하였다. 만약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 수준이었다면, 1997~2011년 가상 잠재성장률은 5.0%로 실제 잠재성장률 4.5%보다 0.5%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잠재성장률은 2008년부터 3%대로 추락하였으나, 가상 잠재성장률은 2008~2011년 내내 4%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소비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정책 과제) 소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 에너지 기반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물가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상승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넷째, 대출가구의 상환능력과 소비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미소금융 지원 시 경영컨설팅을 병행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등의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서민 일자리 알선과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하위일자리보다는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중간일자리로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

소비의 장기침체 지속	
소비의 장기침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지속</li> <li>· 외환위기 이전('90~'97) : 소비증가율(7.4%) ≒ GDP증가율(7.5%)</li> <li>· 외환위기 이후('97~'11) : 소비증가율(3.1%) &lt; GDP증가율(4.2%)</li> </ul>

소비의 장기침체 배경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소득 증가율 급락 : 6.9%('90~'97) → 0.8%('97~'11)</li> <li>- 고용부진 : 신규취업자수 44.7만명('90~'97) → 21.6만명('97~'11) 고용률 59.8%('90~'97) → 58.9%('97~'11)</li> <li>- 실질임금 증가율 하락 : 5.7%('93~'97) → 1.5%('97~'11)</li> <li>- 경제위기 시 물가 급등 : '98년 7.5%, '03년 3.5%, '08년 4.7%</li> <li>- 교역조건 악화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165.2('90) → 78.8('11)</li> </ul>
逆자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자산 : 경제위기시 금융자산 가치 하락, 변동성 확대</li> <li>- 부동산자산 : 경제위기시 주택가격 하락으로 자산효과 미약</li> </ul>
비소비지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비용 상승 : 34.4조원('02년) → 55.5조원('11년)</li> <li>· 이로 인한 실질소비 감소액 : 27.0조원('02년) → 34.9조원('11년)</li> <li>- 세금·사회보험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5.0%('90년) → 10.8%('11년)</li> </ul>
중산층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5분위 배율 상승 : 4.1('90) → 5.7('11)</li> <li>- 중산층 비중 하락 : 75.4%('90) → 67.5%('11)</li> <li>· 반면 빈곤층 비중 상승 : 7.1%('90) → 12.5%('11)</li> </ul>

소비의 장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일자리 기회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소비증가율(3.1%)이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li> <li>· '97~'11 연평균 일자리 96.2만개 추가 창출, 고용률 2.5%p 상승</li> </ul>
잠재성장률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소비증가율(3.1%)이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li> <li>· '97~'11 잠재성장률(가상)은 5.0%로 실제 잠재성장률 4.5%보다 0.5%p 상승</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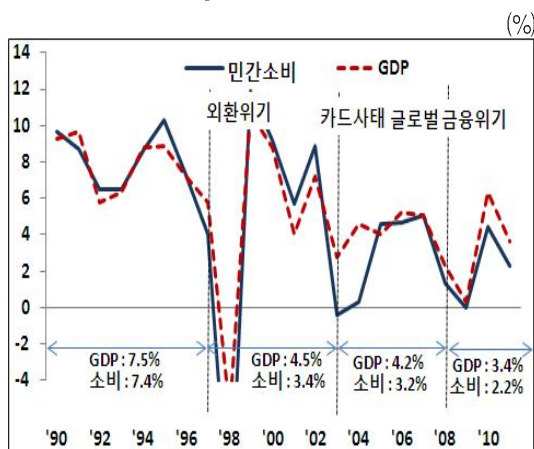
정책 대응 방향	
정책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째, 교역조건 개선을 통한 소득 향상</li> <li>둘째,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li> <li>셋째, 물가 불안심리 완화</li> <li>넷째,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금융 확대</li> <li>다섯째, 소득 양극화 개선을 통한 중산층 육성</li> </ul>

## 1. 소비의 장기침체 지속

○ (장기 추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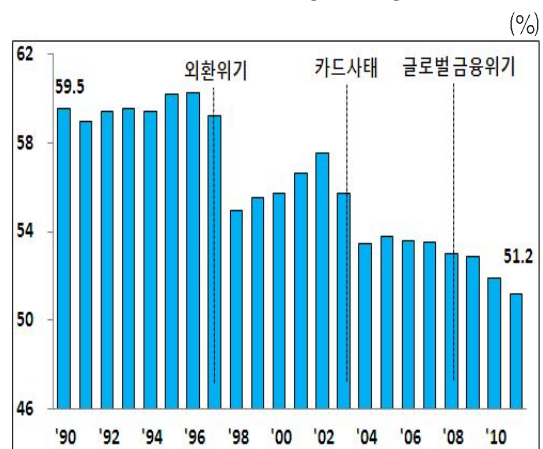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7.4%로, GDP증가율 7.5%와 비슷한 수준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11년 소비증가율이 3.1%에 머물면서 GDP증가율 4.2%를 크게 하회
  - 1997~2003년(외환위기~카드사태) 소비증가율은 3.4%로, GDP증가율 4.5%를 1.1%p 하회
  - 2003~2008년(카드사태~글로벌금융위기) 소비증가율이 3.2%에 머물러, GDP증가율 4.2%보다 1.0%p 낮은 수준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 소비증가율은 2.2%로 GDP증가율 3.4%를 1.2%p 밑돌고 있음
- 이에 따라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작아지고 있음
  -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GDP 대비 소비 비중은 60.3%였으나,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1년에는 51.2%로 9.1%p나 하락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GDP 중 소비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 (최근 현황) 최근에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소비증가율이 2010년 4.4%에서 2011년 2.3%로 하락. 특히 2011년 4/4분기에 1.1%로 급락하였고 2012년 1/4분기에는 1.6%를 기록
- 내구재 및 준내구재가 최근의 소비 위축을 이끔. 내구재는 2011년 3/4분기 10.8%에서 2012년 1/4분기 3.6%로 급락하였고 준내구재도 4.1%에서 0.6%로 하락
- 소비가 위축되면서 GDP증가율도 2010년 6.3%에서 2011년 3.6%로 크게 하락하였고, 2012년 1/4분기는 2.8%를 기록
- 최근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30%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2011년 4/4분기에 17.1%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 2011년 1/4~2/4분기 38.0%, 43.4%이던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3/4분기 29.9%, 4/4분기 17.1%로 급락. 2012년 1월에는 30.9%를 기록

○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비의 장기침체 배경과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소비 관련 지표 추이>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1/4
GDP증가율	2.3	0.3	6.3	3.6	4.2	3.5	3.6	3.3	2.8
소비증가율	1.3	-0.0	4.4	2.3	2.9	3.0	2.1	1.1	1.6
소비의 성장기여율	30.6	-1.4	36.7	32.3	38.0	43.4	29.9	17.1	30.9
소매판매액 지수	1.1	2.7	6.7	4.3	5.4	5.7	4.7	1.9	1.9
내구재	1.6	8.2	14.8	10.8	12.5	17.3	10.8	3.4	3.6
준내구재	-3.0	1.3	6.8	4.2	5.8	5.0	4.1	2.4	0.6
비내구재	1.4	1.2	2.2	1.1	1.4	-0.6	1.8	1.7	2.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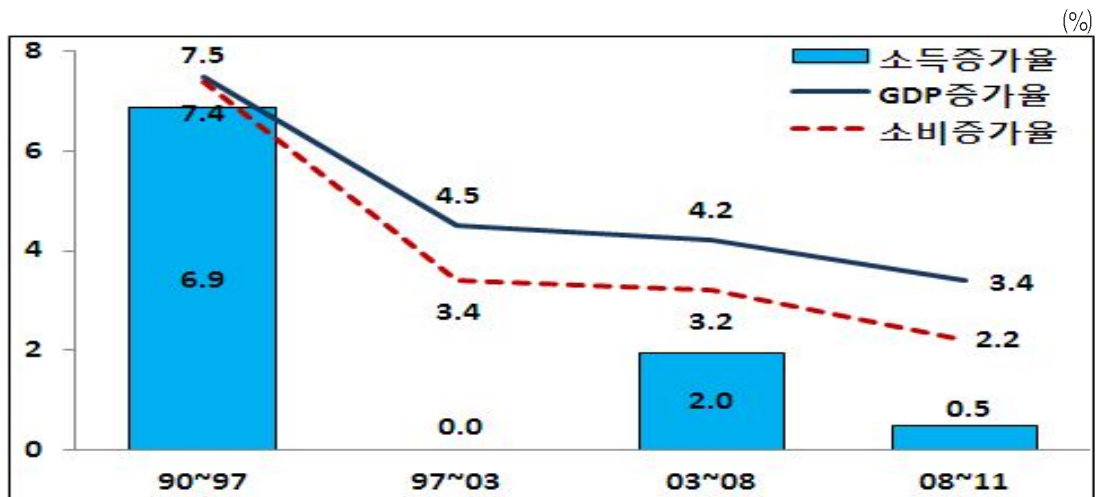
## 2. 장기침체 배경

### (1)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 ○ (실질소득 추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

-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6.9%로, 소비증가율 7.4%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함
  - 높은 소득증가율이 뒷받침되면서 소비증가율과 GDP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선순환구조 형성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0.8%로 급락하면서, 같은 기간 소비증가율을 3.1%로 끌어내림
  - 1997~2003년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0.0%로, 소비증가율 3.4%를 크게 하회<sup>1)</sup>
  - 카드사태 이후인 2003~2008년 소득증가율은 2.0%, 소비증가율은 3.2%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에는 소득증가율이 0.5%로 하락하면서 소비증가율도 2.2%에 머물

<소득-소비-GDP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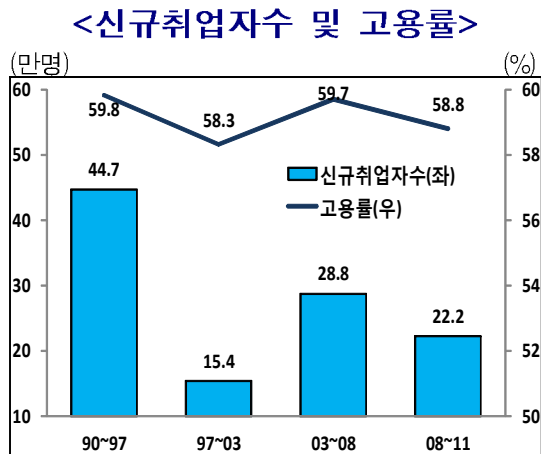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소득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1) 정부의 '빚을 통한 내수진작책(카드대출 급증)'으로 가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소비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며, 결국 카드사태를 낳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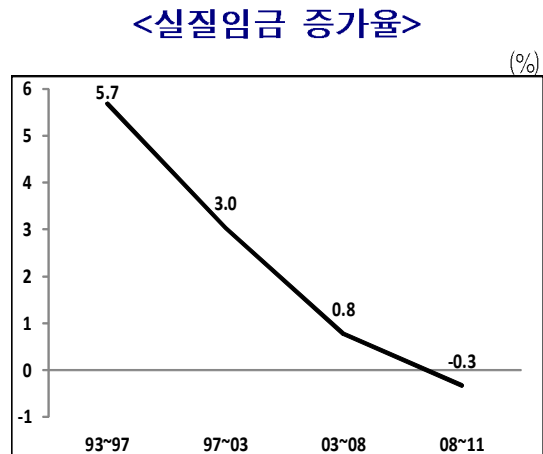


○ (고용 부진) 고용 부진과 임금 정체가 소득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

- 1990~1997년 연평균 신규취업자수는 44.7만 명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에는 21.6만 명으로 급락
  - 1997~2003년에는 15.4만 명, 2003~2008년에는 28.8만 명, 2009~2011년에는 22.2만 명임
- 이에 따라 고용률도 1990~1997년 59.8%에서 1997~2011년 58.9%로 하락
  - 1997~2003년 58.3%, 2003~2008년 59.7%, 2009~2011년 58.8%임
- 실질임금 증가율은 1993~1997년 5.7%에서 1997~2011년 1.5%로 크게 하락2)
  - 외환위기 이전(1992~1997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5.7%를 기록
  -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빈번해지면서 실질임금 증가율도 크게 떨어짐. 1997~2003년 3.0%, 2003~2008년 0.8%, 2009~2011년 -0.3%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舊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주1 : 1993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주2 : 1993~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 사용자, 1999~2011년은 5인 이상 사업체 사용자 기준임

2)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舊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발표하는 명목임금을 기초로,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실질임금 증가율을 산출하였음. 1993~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 사용자 기준이고, 1999~2011년은 5인 이상 사업체 사용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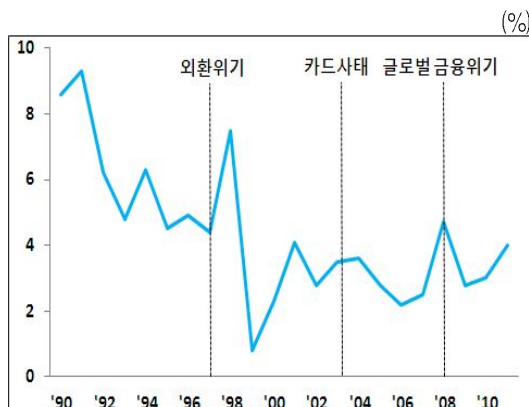
○ (물가 부담) 경제위기 때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소득 정체를 낳음

- GDP증가율이 떨어지면서 물가상승률도 하락하는 추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0~1997년 6.1%에서 1997~2011년 3.3%로 하락
  - 같은 기간 GDP증가율은 7.5%에서 4.2%로 하락
- 하지만 경제위기 때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됨
  - 1997~1998년 외환위기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4.4%, 7.5%로 매우 높았으며, 2003~2004년 카드사태 때는 3.5%, 3.6%, 글로벌금융위기인 2008년에는 4.7%를 기록

○ (교역조건 악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소득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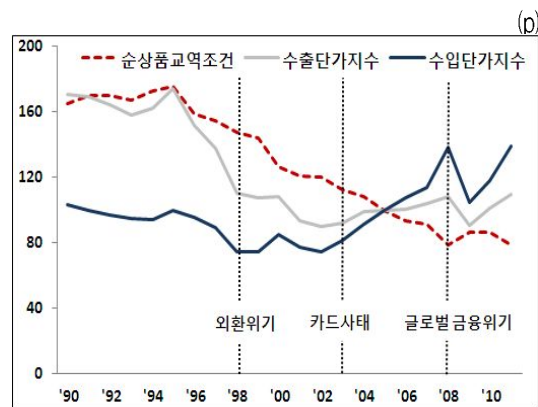
-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품 1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가 1990년 165.2에서 2011년 78.8로 급락
  - 수출액의 29.6%(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단가지수가 같은 기간 170.8에서 109.8로 하락
  - 반면 원유(수입액의 19.2%)와 광물(수입액의 38.1%)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단가지수는 같은 기간 103.4에서 139.3으로 상승

<물가상승률>



자료 : 통계청

<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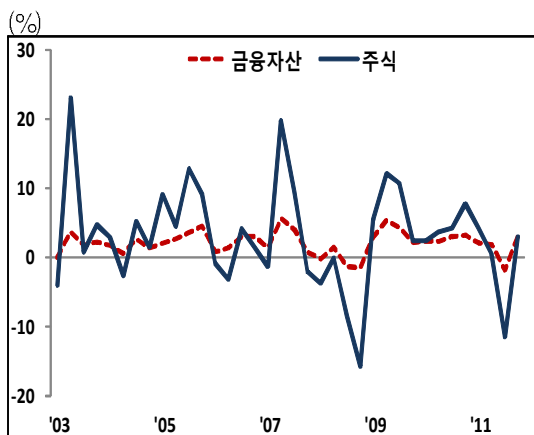
3) 국민총소득(GNI) = 국내총생산(GDP) +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손익 + 국외 순수취요소소득.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민총소득이 감소함

## (2) 逆자산효과

○ (금융자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逆자산효과<sup>4)</sup>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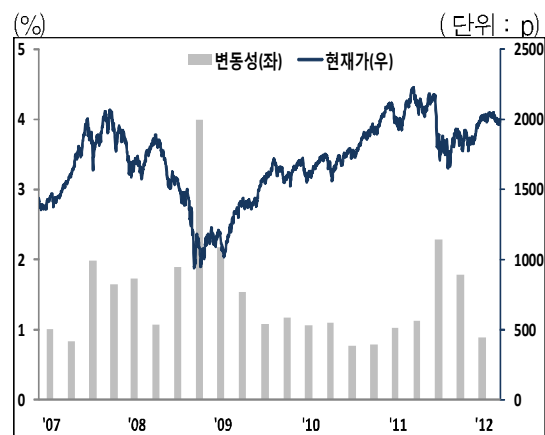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금융자산이 줄어들고, 주가는 폭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됨
  -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금융자산이 2007년 말 1,724.0조원에서 2008년 말 1,687.2조원으로 감소
  - 2002년 통계 발표 이후 처음 줄어든 것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크게 하락
  - 주가(코스피)는 2007년말 1,897p에서 2008년 10월 27일 946p까지 급락
  - 주가변동성(전일대비 주가변화율의 표준편차)도 2007년 4/4분기 1.65%에서 2008년 4/4분기 3.99%로 크게 확대되면서 자산효과가 제한됨
- 2011년 3/4분기에도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재정위기로 다시 금융자산은 감소하고 변동폭은 커짐
  - 2011년 3/4분기 가계의 금융자산이 전기대비 1.8% 감소(2,275.7→2,234.4조원). 11분기 만에 감소
  - 주가는 2011년 7월 7일 2,181p를 기록한 이후 9월 26일 1,653p로 하락
  - 주가변동성도 2011년 2/4분기 1.12%에서 3/4분기 2.28%로 확대

< 가계의 금융자산·주식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2002년부터 자료 제공)

< 주가 및 주가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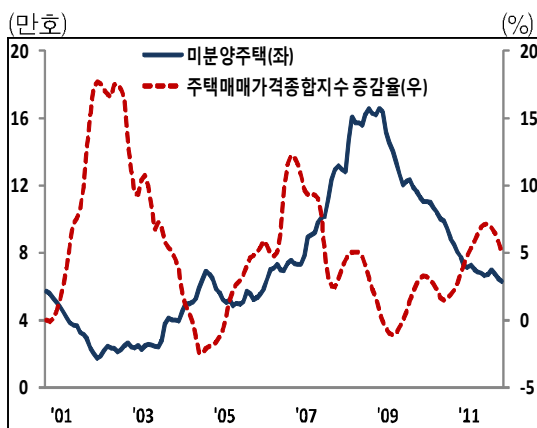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주 : 변동성은 전일대비 주가변화율의 표준편차

4) 逆자산효과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도 감소하는 현상

○ (부동산자산)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산효과가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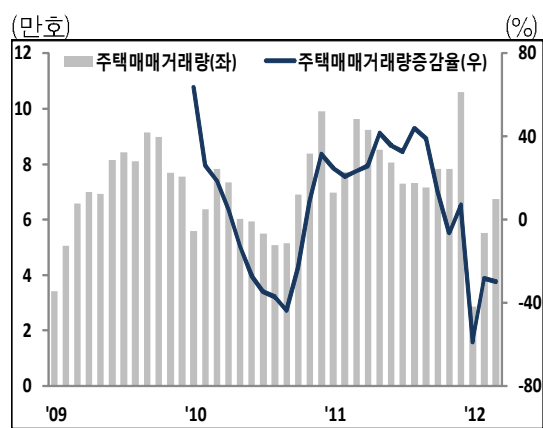
- 카드사태 및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 주택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위기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산효과가 크게 약화됨
  - 카드사태 이전인 2002년 11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7.1%에 달했으나, 카드사태 이후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9%를 상회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2011년 4월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4~7%의 증가세를 보이고, 미분양주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주택매매거래량이 2011년 12월 10.6만 채에서 2012년 1월 2.9만 채로 급감하는 등 여전히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음
  -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소형주택보다는 대형주택이 침체되어 있음

< 미분양주택 및 주택매매가격 >



자료 : 국토해양부, 국민은행  
 주1 :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주2 : 미분양주택 자료는 2001년부터 제공됨

< 주택매매거래량과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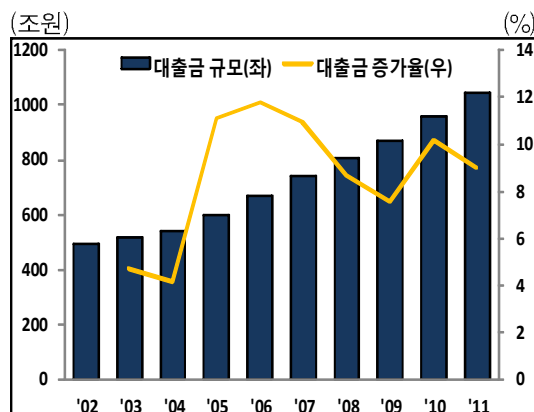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2009년부터 자료 제공)  
 주1 : 주택매매거래량은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 (3) 비소비지출 증가

○ (이자비용 상승) 가계의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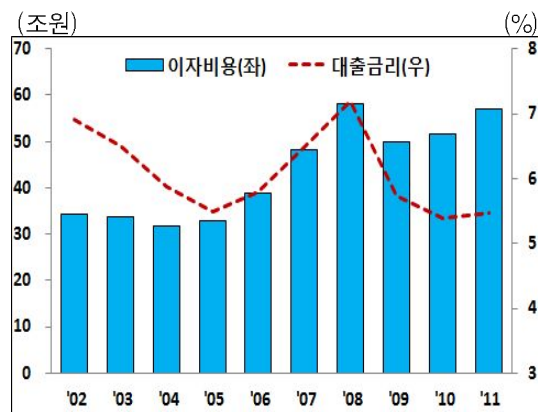
-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부채가 2002~2011년 평균 8.6%씩 증가(495.1조원→1,043.2조원)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명목) 증가율 5.8%를 크게 상회
  - 이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02년 121.7%에서 2011년 154.8%로 상승
- 가계부채로 빚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심각
  - 부채가 있는 가구의 78.3%는 빚 부담 때문에 실제로 소비를 줄이고 있음 (2011년 가계금융조사)
  - 빚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채무상환비율(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2010년 26.5%에서 2011년 29.0%로 상승
  -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음. 소득1분위는 2010년 46.5%에서 2011년 84.4%로, 자영업자는 30.7%에서 37.1%로 악화됨
- 가계의 이자비용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실질소비가 감소하고 있음
  - 원금을 제외한 이자비용(부채잔액×대출금리)이 2002년 34.4조원에서 2011년 55.5조원으로 증가
  - 이로 인한 소비감소액(실질)<sup>5)</sup>은 2002년 27.0조원, 2011년 34.9조원에 달함

<가계부채>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가계부채 자료는 2002년부터 제공됨  
 주2 :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부채는 대출금과 정부융자를 합해 산출

<가계대출금리 및 이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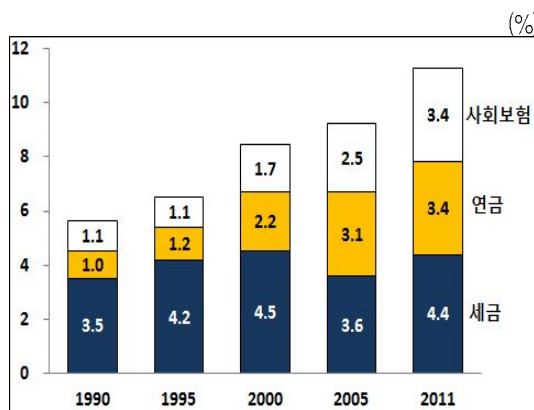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데이터로 추산  
 주1 : 가계부채 자료는 2002년부터 제공됨  
 주2 : 이자비용은 대출 잔액에 평균 대출금리를 곱해 산출

5) 소비감소액(명목) = 이자비용 × 평균소비성향  
 소비감소액(실질) = 소비감소액(명목)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 (세금·사회보험 증가)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의 공적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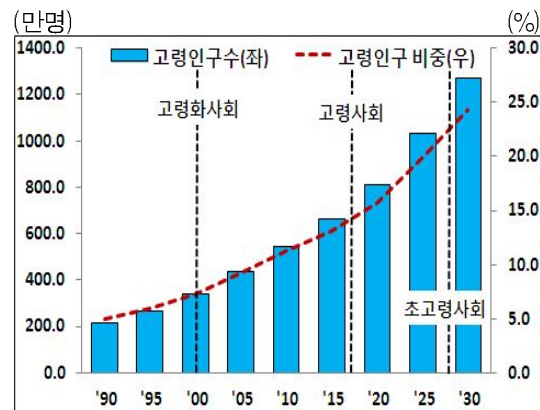
- 1990년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5.0%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0.8%로 상승
  - 1990~2011년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은 연평균 10.8%씩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증가율 6.8%를 크게 상회
  - 특히 연금(국민연금 등)과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은 각각 13.9%, 12.8%씩 크게 증가
- 경제규모가 커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적 소비지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출산율이 낮은 가운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에는 20%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미래투자(노후준비 등)를 늘림에 따라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세금·연금·사회보험 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주2 : 비중은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임

<고령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

(4) 중산층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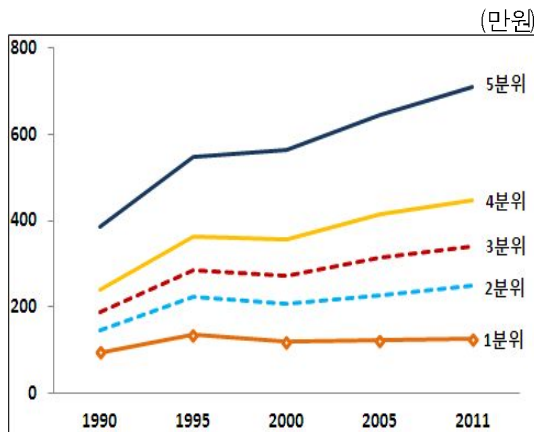
○ (소득양극화 심화)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소득5분위 배율이 1990년 4.1에서 2011년 5.7로 상승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990~2011년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연평균 1.4%씩 증가(94.1만→125.4만원)한 반면, 5분위 소득은 연평균 3.0%씩 증가(385.6만→710.5만원)
-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됨
  - 5분위는 소득 710.5만원 중 61.8%인 439.1만원만을 소비하는 반면, 1분위는 소득 125.4만원보다 많은 150.7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중산층 감소)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이 감소하는 반면 소비여력이 약한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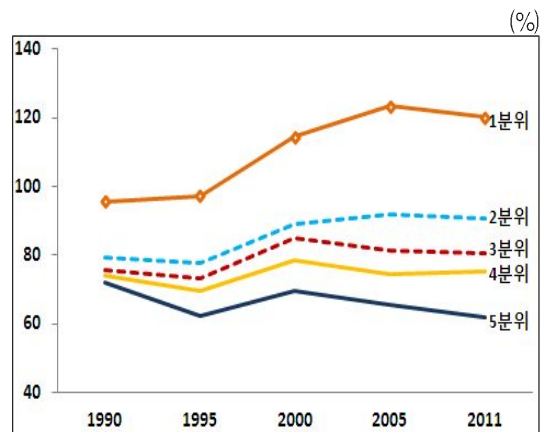
-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감소
  - 반면 소득이 적어 소비여력이 부족한 빈곤층 비중은 7.1%에서 12.5%로 증가. 거의 100만 가구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산됨

<분위별 실질소득>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 3.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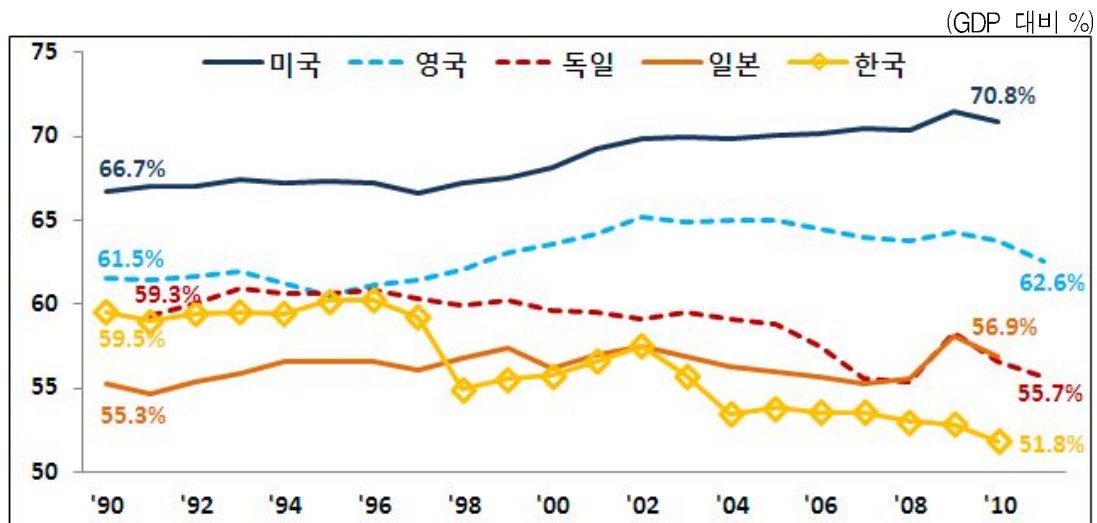
○ (가정) 외환위기 이후(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라고 가정한 후 경제적 손실 추정

- 소비의 장기침체란 소비증가율이 지속적으로 GDP증가율을 밑도는 현상
- 소비의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란, '소비증가율 = GDP증가율 = 4.2%' 와 실제(소비증가율 = 3.1% < 4.2% = GDP증가율)의 격차로 인한 일자리 기회 상실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뜻함
  - 소비증가율과 GDP증가율이 같을 경우, GDP 대비 소비 비중( $\frac{\text{소비}}{\text{GDP}}$ )이 일정하게 유지됨. 그러므로 GDP 대비 소비 비중이 1997~2011년에도 1996년 수준(60.3%)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

○ (가정의 타당성)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장기침체 현상은 한국 경제의 특수한 현상으로,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히 극복해야 할 것임

- 독일을 제외한 G7 국가 모두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상회
  - 1990~2010년 미국의 소비증가율 및 GDP증가율은 각각 2.8%, 2.7%
  - 영국(1990~2011년)은 각각 2.3%, 2.2%. 일본(1990~2010년)은 각각 1.0%, 1.0%
  - 독일(1991~2011년; 통일 후)은 각각 1.0%, 1.3%임

< 주요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 >



자료 : OECD



○ (일자리 기회 상실) 만약 외환위기 이후에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장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자리가 연평균 96.2만 개 추가로 창출되고 고용률도 2.5%p 상승했을 것으로 추산됨

- 실제 고용률 : '소비증가율(3.1%)<GDP증가율(4.2%)'일 때

-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연평균 고용률은 60.0%였으나, 외환위기 이후(1997~2011년) 59.0%로 1.0%p 하락

- 가상 고용률 : '소비증가율(4.2%)=GDP증가율(4.2%)'로 가정했을 때

- 만약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 추가되는 민간소비가 연평균 50.0조원임
- 이에 따라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연평균 96.2만 개에 달함<sup>6)</sup>
- 고용률(가상)도 61.5%에 이르러, 실제 고용률 59.0%보다 2.5%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됨

<소비의 장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기회 상실>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8	2010	2011	'97~'11 연평균
실제	고용률(%)	60.9	58.5	59.3	59.7	59.5	58.7	59.1	59.0
	잠재성장률(%)	5.9	5.2	4.6	4.3	3.9	3.8	3.8	4.5
가상	추가소비(10억원)	6,272	31,589	36,054	56,015	70,880	87,437	98,054	49,974
	추가일자리수(만명)	+12.3	+61.9	+70.7	+109.8	+134.7	+166.1	+186.3	+96.2
	고용률(%)	61.2	60.2	61.2	62.5	62.9	62.8	63.6	61.5
	잠재성장률(%)	6.5	5.7	5.1	4.8	4.3	4.2	4.2	5.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1 : 실제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산

주2 : '가상'이란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의 추산임

주3 : 추가일자리수 = 추가소비 × 취업유발계수(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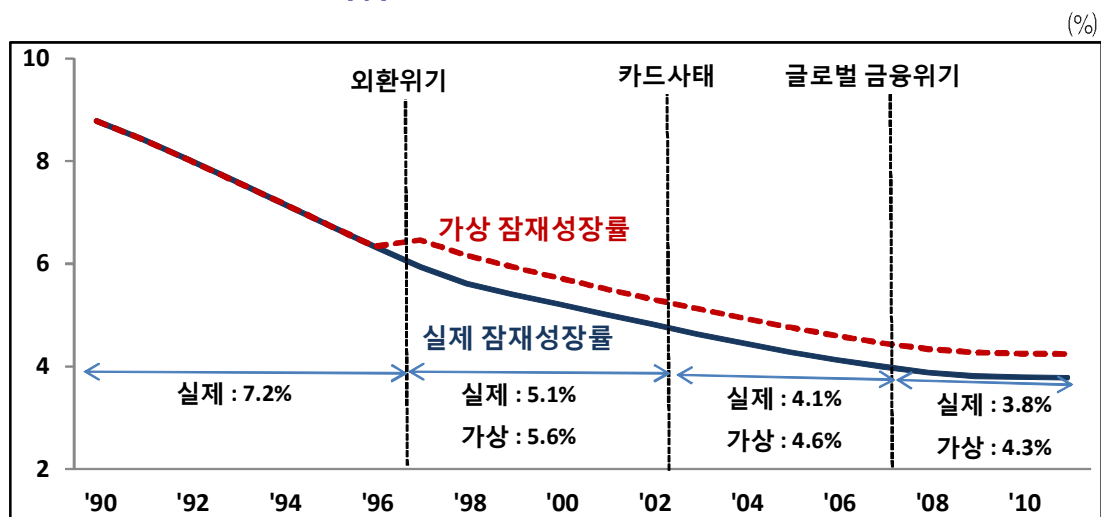
주4 : 한국은행은 2005~2009년 취업유발계수(불변가격)를 제공하고 있음. 2005~2009년 각각 19.6명/10억원, 19.2명/10억원, 19.1명/10억원, 19.0명/10억원, 19.0명/10억원임  
1997~2006년은 19.6명/10억원, 2010~2011년은 19.0명/10억원 적용

6) 추가일자리수 = 추가소비 × 취업유발계수(불변가격)

○ (잠재성장률 하락) 만약 외환위기 이후에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장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잠재성장률이 0.5%p 상승했을 것으로 추산됨

- 실제 잠재성장률 : '소비증가율(3.1%)<GDP증가율(4.2%)'일 때
  - 단순추세법(HP-필터링)으로 산출한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에는 7.2%였으나 외환위기 이후(1997~2011년) 4.5%로 하락함
  - 1997~2003년 5.1%에서 2003~2008년 4.1%, 2008~2011년 3.8%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가상 잠재성장률 : '소비증가율(4.2%)=GDP증가율(4.2%)'로 가정했을 때
  - 만약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 잠재성장률(가상)은 5.0%를 기록하여 실제 잠재성장률 4.5%보다 0.5%p 상승했을 것으로 추산됨
  - 잠재성장률(가상)은 1997~2003년 5.6%, 2003~2008년 4.6%, 2008~2011년 4.3%로 추산됨
  - 실제 잠재성장률은 2008년부터 3%대로 추락하였으나, 가상 잠재성장률에서는 4%대를 유지 (2008~2011년 각각 4.3%, 4.3%, 4.2%, 4.2%)

<소비침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



자료 : 한국은행

주1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

주2 : '가상'이란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의 추산임

7)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2-03 “잠재성장률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 참조

####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소비 전망) 2012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1년의 2.3%와 비슷한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고용 부진 지속 : 2012년에도 고용이 부진하고 실질임금이 정체될 전망
    - 신규취업자수는 2011년 41.5만 명에서 2012년 30만명대 초반에 머물 전망
    -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실질임금 하락세 지속
  - 물가 불안 지속: 기대 인플레이션률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못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4.0%에서 2012년 3%대 중반으로 둔화
    -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률이 2011년 4월 4%대로 상승한 이후 2012년 4월까지 3.8~4.3%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못할 전망
  - 교역조건 악화 지속 :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거대신흥국의 원유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원유생산능력이 제약되면서, 수입 단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 원리금 상환부담 지속 :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상승할 전망
    -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조건 강화로 금융부채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지속되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
    - 이자비용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원금 상환 압력 가중
  -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 부담 증가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소비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책 과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소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매우 절실함

- **일자리 창출** : 민간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 올해부터 시행중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 고용창출력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을 집중 육성
  - 음식숙박업, 미용업, 소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자영업분야에서 출혈 경쟁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
  
- **물가 불안심리 완화** : 공공요금 상승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
  -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변동폭 축소
  - 통화 공급이 물가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금리 수준을 산정·유지
  
- **가계부채 연착륙** : 대출가구의 상환능력과 소비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 외환위기 이후 '빚을 통한 내수진작책(카드대출 급증)'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진작시켰으나 장기적으로 카드사태를 낳음(1997~2003년 연평균 소득증가율 -0.0%, 소비증가율 3.4%)
  - 부채규모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부채구조를 개선(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장려)
  - 가계부채 해결 과정에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일자리창출과 연계

- 미소금융 지원 시 경영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 채무조정, 바뀐드림론 등의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서민 일자리 알선 및 재무 상담과 병행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 **교역조건 개선** :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 에너지 기반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
- 수출품 고부가가치화 : 단가 하락폭이 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R&D 투자로 단가 하락을 최소화
  - 수출 품목의 다각화 : 수출단가가 안정적인 부품소재산업과 문화산업 등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추가 육성하여 수출 체질 강화
  - 해외자원 개발과 신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산층 육성** :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중간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
- 민간부문이 양질의 중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부문도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간일자리 확대
  - 저임금 근로자들이 중간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강화. 중간일 자리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준협 연구위원 (02-2072-6219, sododuk1@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 (02-2072-6211, ck100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5월 4일	5월 1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88	1.86	-0.02%p
	엔/달러	81.19	80.66	77.66	80.25	79.66	-0.59¥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152	1.2938	-0.0214\$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38	12,855	-183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	8,978	-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2	3.40	-0.02%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1.3	1,142.5	11.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89.2	1,944.9	-44.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5월 4일	5월 1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8.53	96.98	-1.55\$
	Dubai	88.80	106.75	104.89	112.92	109.38	-3.54\$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7.15	294.59	-2.5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